

(2017. 6. 17 시행) 지방직 9급 기출문제 [사회 : (B) 책형]

[장 수 원 선생님]

(중앙로/충남대) 제일고시학원 / www.okpass.com

1.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VI. 국제 정치과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문제

- ① (X) 탈냉전 이후의 국제 사회의 주요 문제로 환경, 보건, 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보 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냉전 시대에서의 이념 갈등 인한 분쟁이 탈냉전 이후에는 인종·민족·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분쟁으로 분쟁의 양상이 변화한 것뿐입니다.
- ② (X) 오늘날 환경, 보건, 인권 등의 국제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변 국가의 문제이자 국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③ (O) 교토 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였습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1995년 3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키로 하는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을 채택함에 따라 1997년 12월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의정서가 채택되기까지는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와 감축 일정, 개발도상국의 참여 문제로 선진국간, 선진국·개발도상국간의 의견 차이로 심한 대립을 겪기도 했지만,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였습니다.
- ④ (X) 선진국과 저개발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는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 및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남북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동서문제’는 냉전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세력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립의 문제를 말합니다.

2.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정당

- ① (O)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 정당 제도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② (O) 헌법 제8조 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X)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8조 제4항).
- ④ (O) 정당은 여론을 형성·조직하여 정부에 전달하거나,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합니다.

3.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계약설

사유재산제로 인해 불평등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갑은 '루소', 저항권을 인정하는 을 '로크',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인정하는 병은 '홉스'입니다.

- ① (O) 병(홉스)은 자연권의 전부 양도를 인정하고, 을(로크)은 자연권의 일부 양도(또는 일부 위임)를 인정하는 반면, 갑(루소)은 자연권의 양도를 부정합니다. 따라서 개인들이 국가에 권리를 양도한 정도는 병(홉스)이 가장 큼니다.
- ② (X) 을(로크)은 입헌 군주제를 인정하였지만, 갑(루소)은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였습니다.
- ③ (X) 갑(루소)과 을(로크)은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로 인식한 반면, 병(홉스)은 자연 상태를 개인에 대한 생존의 위협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보았습니다.
- ④ (X) 갑(루소)과 을(로크)은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 반면, 병(홉스)은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 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보통선거권이 보장되는 (다)는 현대 민주 정치에 해당하고, 대의제가 인정되는 (가)는 근대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나)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 ① (X) 공직자를 추천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한 것은 (나)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입니다.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제한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였습니다.
- ② (X) (나)의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시행된 것은 맞지만, 입헌주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③ (X)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의 선거권 취득을 위한 운동으로 (가)의 근대 민주 정치에서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된 (다)의 현대 민주 정치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 ④ (O) (나)의 근대 민주 정치와 달리 (다)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되었습니다.

5.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선거제도 - 대표제(당선자 결정 방식)

- ① (X) A국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단순 다수 대표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다수 대표제(=상대 다수 대표제= 다수 대표제)는 선거구에서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선 투표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1차 투표의 1,2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투표를 말합니다.
- ② (O) A국의 의회는 전체 의회 의원 정수(550명)의 대부분인 500명이 지역구 의원에 해당하는 데, 그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1명만 당선되므로, A국의 의회는 다당제보다는 양당제일 가능성이 큼니다.
- ③ (X) A국 의회는 총 의석수(550석) 중 비례대표 의원 정수인 50석만 정당 득표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 ④ (X) A국의 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다수 대표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의 당선 가능성이 낮습니다.

6. [정답] ①

[출제단원]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

측정 가능한 계량화된 자료를 통해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A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인간의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B는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 ㄱ.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법칙을 발견해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 ㄴ. (O) 앞서 설명한 것처럼 A는 실증적 연구 방법입니다.
- ㄷ. (X) B가 ‘해석적 연구’라는 부분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 법칙 발견에 적합’한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 ㄹ. (X) 통계화된 자료의 수집을 중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 방법의 특징입니다.

7.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 변동

- ① (X) ㉠에서 햄버거가 ‘등장’했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발명’에 해당합니다.
- ② (X) 문화 지체라는 것은 물질문화의 변동 속도를 비물질 문화가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조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서 ‘햄버거가 미국에서 유입’된 것은 문화 전파에 해당할 뿐이지, 문화 지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X) 강제적 문화 접변이란 정복이나 식민 통치의 경우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는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미국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④ (O) ㉢에서 햄버거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청소년과 하층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문화 양식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햄버거가 미국 사회에서 하위문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8.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 ① (O) 대학교는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간접적이고 비인격적인 접촉이 중심이 되는 2차 집단입니다. 또한 결합의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선택적 의지에 따라 결합하는 이익 사회입니다.
- ② (X) 시민단체가 이익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한 공식조직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으로 분류됩니다.
- ③ (X) 종친회는 공동 사회가 아니라 이익 사회입니다. 아버지 쪽의 친족집단을 의미하는 ‘종친’은 공동 사회지만 종친끼리 결성한 ‘종친회’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이익 사회에 해당합니다.
- ④ (X) 대기업이 공식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결성된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아닙니다.

9.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 ① (X)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은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 둘 다 “예”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 ② (X)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낙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공공 부조이기 때문에 (나)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사회 보험에서는 “아니요”, 공공 부조에서는 “예”라는 답변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공 부조를 받는다는 것은 가난을 공인받는 것이니 나쁘게 표현하면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③ (O) 기초 연금은 공공 부조니까 (다)의 질문이 “기초연금제도가 해당되는가?”라고 하면 A는 ‘아니요’, B는 ‘예’가 돼야 합니다.
- ④ (X)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입니다. 따라서 (라)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C는 ‘예’, D는 ‘아니요’가 들어가야 합니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계층 구조(자료분석형 문제)

- ① (X) 갑국의 자녀 세대는 상층 10%(7+3), 중층 30%(24+6), 하층 60%(54+6)입니다. 따라서 갑국의 자녀 세대는 ‘하층>중층>상층’의 구성 비율을 보이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입니다.
- ② (O) 을국의 상층에서 부모와 불일치한 2%는 부모가 중층이나 하층이었는데 ‘상승 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또한 하층에서 부모와 불일치한 14%는 부모가 중층이나 상층이었는데 ‘하강 이동’한 경우입니다. 중층에서 부모와 불일치한 6%는 부모가 상층이었다면 ‘하강 이동’한 것이고, 부모가 하층이었다면 ‘상승 이동’한 경우로 이 6%가 어떤 이동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가 모두 상승 이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승 이동은 8%(2+6)로 하강 이동 14%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실히 을국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X) 병국에서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은 상층에서 8%, 하층에서 4%로 합치면 12%입니다. 중층의 경우 18%인데 이것은 상층과 하층을 합친 12%보다 큼니다.
- ④ (X) 제시된 자료는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와의 계층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만을 가지고는 부모의 계층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1. [정답] ①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 A재 : A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은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수요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E_d > 1$)입니다.
- B재 : B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입이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B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E_d =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C재 : C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할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므로 가격이 상승한 비율에 비해 수요량(판매량)이 감소한 비율이 더 작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0 < E_d < 1$)입니다.
- D재 : D재의 경우 가격이 상승한 비율과 판매 수입이 증가한 비율이 같으므로 수요량(판매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요량 변화율이 0%이므로, D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E_d = 0$)입니다.

- ㄱ. (O) 위 결과에서 A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ㄴ. (O) 수요 법칙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법칙을 말합니다. D재는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므로,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 ㄷ. (X) 가격이 상승할 때 A재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D재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재와 D재의 수요량 변동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ㄹ. (X) B재는 C재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니다.

12.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 수지표의 이해

- ① (X)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만을 통해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이 2016년에 비해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의 상품 수출액이 200억 달러, 수입액이 100억 달러였다가 2016년의 상품 수출액이 150억 달러, 수입액이 40억 달러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불황형 흑자) 따라서 2016년 A국의 상품 수출액 증가율이 상품 수입액 증가율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② (X) 국제 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를 의미하고, 수출입 규모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품 수지나 서비스 수지가 크다고 하여 상품의 수출입 규모나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즉,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A국에서 상품의 수출입 규모보다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규모가 더 큰 것인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③ (O) 경상 수지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본원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로 구성되므로, (가)는 본원 소득 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국의 정부가 외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한 이자는 본원 소득 수지(가)의 지급 요인에 해당합니다.
- ④ (X) 이전 소득 수지는 국가 간의 무상 원조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출연금이나 해외 유학생 및 교포에의 송금 등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A국의 이전 소득 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A국이 외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해 주는 나라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3.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외환 시장의 균형점이 E에서 A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① (X) 한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한국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져 한국 금융 상품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달러 공급 증가)하거나, 미국 금융 상품에 대한 한국인의 투자가 감소(달러 수요 감소)할 것입니다. 즉,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증가시키거나 달러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② (O) 미국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므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 증가는 달러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③ (X)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④ (X)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선호도가 증가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여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의 수입,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매몰비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 매출 1억 5천만 원
명시적 비용	◦ 인건비 3천만 원 ◦ 시설 보수비 1천만 원 ◦ 재료비 7천만 원
암묵적 비용	◦ 연봉 6천만 원
매몰비용	◦ 수강료 1백만 원

- ① (X) 명시적 비용은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고, 암묵적 비용은 다른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연봉 6천만 원(㉠)은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명시적 비용)이 아니라,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수입(암묵적 비용)에 해당합니다.
- ② (X) 매몰비용은 합리적 선택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이므로, 해당 선지의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 ③ (X)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 1억 1천만 원과 암묵적 비용 6천만 원을 더한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 ④ (O) 합리적 선택은 수입(편익)이 기회비용에 비해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례에서 갑이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할 경우 수입은 1억 5천만 원이고, 기회비용은 1억 7천만 원이므로 이 경우 갑은 한식 전문 요리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5.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지표의 변화 추론

고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문제의 사례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었는데 고용률은 높아졌으므로,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취업률} = \frac{\text{취업자 수}}{\text{경제 활동 인구(=취업자 수 + 실업자 수)}} \times 100$$

다른 요인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취업자 수만 증가하면 취업률은 상승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서 취업률은 하락하였다고 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취업률이 하락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수의 증가에 비해 실업자 수의 증가가 더 커야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사례를 통해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는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합한 것인데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가 모두 증가하면 경제 활동 인구는 증가하고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나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한 것인데 15세 이상 인구의 변화가 없으므로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합니다.

16.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 개인생활과 법

[출제영역] 제한 능력자 제도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의 심판이 없어도 제한 능력자로 인정되는 '갑'은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 ① (X) 미성년자인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 ② (X) 미성년자인 갑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행위 능력자인 것으로 믿게 한 경우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갑) 측의 취소권이 부정됩니다(민법 제17조).
- ③ (X) 권리만을 얻는 행위뿐만 아니라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O) 미성년자와 계약을 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여부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17.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국민 참여 재판 제도

제시된 그림의 재판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제도인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해당합니다.

- ① (O) 국민 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고,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배제 결정을 할 수 SLE.
- ② (X)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됩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 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등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③ (X) 국민 참여 재판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사건(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된 경우)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국민 참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④ (X)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중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A회사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사용자가 근로자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① (X)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초심(㉔)절차는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절차'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 진행되는 재심(㉕)절차는 '중앙 노동 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 ② (X) 중앙 노동위원회가 재심(㉕)에서 A회사의 행위(㉔)를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A회사의 행위(㉔)를 부당 노동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 ③ (X)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노동조합(또는 근로자)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 중앙 노동 위원회가 초심(㉔)인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A회사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것을 보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㉔)은 A회사 노동조합이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심(㉓)인 ○○지방 노동 위원회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는 A회사에 유리한 결정이므로 A회사(사용자)는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㉔)을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④ (X)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또는 노동조합)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에서 A회사의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 판정(㉕)에 불복하는 A회사는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판정(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그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① (O) A는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에 해당합니다.
- ② (O) 구성 요건은 위법한 행위를 유형적으로 규정해 둔 것이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부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인정되는데, 이를 구성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표현합니다.
- ③ (O)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나 일반 시민이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④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책임(C)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면 책임(C)이 아니라 위법성(B)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20. [정답] ③

[출제단원] Ⅲ.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제1조에 나타난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 ㄱ. (O) 선거권·공무담임권·국민 투표권 등의 참정권의 보장 및 이와 관련한 민주적인 선거 제도의 보장은 ‘국민 주권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 ㄴ. (O)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국민 주권의 원리’의 실현 방안에 해당합니다.
- ㄷ. (O)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구현함에 있어,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대통령, 국회의원)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적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간접 민주제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직접 민주제(국민 투표)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의제의 채택도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ㄹ. (X) 최저임금제는 국민의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제도로서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입니다.